

참여연대
20주년
1994-2014
활동보고서



목차

인사말

축하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 1994-2014 ————— 04

- 열정과 헌신으로 역사를 만든 선구자 - 명예회원
-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보통사람 - 회원
- 무대 뒤의 숨은 스태프 - 자원활동가
- 지식과 열정으로 무장한 전문가 - 임원
- ‘참여연대’호의 승무원 - 상근활동가

참여로 쓴 역사 - 20년의 현장 ————— 14

참여연대가 꿈 꾀 세상 1994-2014 ————— 18

- 특권과 부정부패가 없는 맑은 사회
-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 국경을 뛰어 넘는 평화인권공동체
- 참여하는 주민들의 세상
- [목록] 세상을 바꾼 성과

스무 살 청년의 성장스토리

활동보고 2013-2014 ————— 37

- 특별보고
- 권력감시 분야
- 사회경제 분야
- 평화국제 분야
- 시민참여/교육연구 분야
- 함께한 사람들
- 사진으로 보는 현장
- 주요 활동목록

성찰과 비전 ————— 54

- 창립 20주년 선언
- 성찰과 비전 보고서

활동원칙 / 살림살이 ————— 58

Contacts

인사말

더 담대하게 더 낮은 곳으로

참여연대가 발족한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시대의 격랑 속에서 오로지 시민의 지지와 참여에 의지해 버텨왔습니다.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경제권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오롯이 결코려운 감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어떤 고상한 이념, 선한 권력도 시민의 참여와 감시 없이는 반드시 부패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자립재정을 실현했기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력감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원치 않는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순간 참여연대를 지켜주고 바로 세워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민의 강한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참여연대 문턱을 밟은 저는 어느새 머리 희끗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낮처럼 지새웠던가요.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과연 제 역할을 다해왔냐고 매섭게 묻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가족들의 절규와 시민들의 다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겠습니다. 시민의 힘을 믿고,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공감의 힘을 믿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향해 더 담대하게 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해 주시고 제 역할을 다하도록 든든히 지켜주세요.



2014. 9.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축하합니다

스무살 참여연대에 한 마디

참여연대 20주년 된거 축하드리고, 참여연대 회원이 된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참여연대는 시민의 가족이자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에게 귀한 유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태희 YB밴드 베이스

진보와 보수가, 여당과 야당이, 정부와 시민사회가, 노동자와 경영진이 머리를 맞대고 행복사회를 향한 '20년의 약속'을 만들어내야 한다. 20년이면 정권이 네 번 바뀐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20년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할 핵심 가치와 핵심 어젠다를 만들어보자.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보다 많은 이들이 고통 받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참여연대는 더 좋은 사회를 꿈꾸며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고 했던 시민들의 꿈이 하나 둘 영글고, 그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던 시민의 꿈터이자 일터였습니다. '함께 만드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참여연대 스무살을 축하하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저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과 함께 한 참여연대가 정말 좋습니다. 지난 20년처럼 참여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설 것을 믿습니다. 참여연대, 참 고맙습니다.

김조광수 영화감독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참여연대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조셉 거슨 미국친우봉사회 AFSC

우리 한번 나부터 변화자. 나부터 낮은 자세로, 그리고 연대하고 같이 협력하자,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올겁니다.

맹봉학 회원, 배우



우리 함께, '수긍할 만큼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대표

조금 덜 치열한 사회 조금 더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참여연대와 제가 함께 꾸는 꿈이 아닐까요.

김남훈 WWE/UFC 해설위원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철학과 양심에 따른 생각을 두려움 없이 말할수 있는 사회,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한 통제 없이 구성원들 스스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참여연대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혜진 방송인, 전 MBC 아나운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이 땅에 실시되는 꿈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도록 우리 함께 꿈을 꾀시다. 그러면 기본소득제는 꿈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될 것입니다.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참여연대에 참여하면서 가졌던 그 시민사회의 투명성, 연대성, 참여성, 헌신성의 가치를 열심히 견지하면서, 저에게 새롭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 같이 꾸는 꿈은 희망의 꿈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참여연대와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며, 나라 걱정 그만하고 앞으로 나의 삶을 걱정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 꿉니다.

김중훈 회원



열정과 헌신으로 역사를 만든 선구자 - 명예회원

참여연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금은 고인이 되신 다섯 분의 회원을 명예회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늘 참여연대를 사랑한 회원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명예로운 시민이었습니다.
다섯 분의 명예회원들이 생전에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기우봉 1936. 4. 5 ~ 2008. 3. 1

기우봉 선생님은 참여연대 시민로비단과 서울시 청렴계약 옴부즈만으로 반부패 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고회를 넘긴 나이에도 풍력발전 친환경에너지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상근자가 시민운동의 기동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말기 암과 싸우시던 중에도, 평소 검소한 생활로 모은 재산을 시민단체 상근자 교육기금과 풍력발전기금으로 남기셨습니다.

1936 대구 달성에서 출생
1998 참여연대 회원가입, 시민로비단 활동
1999 참여연대 회원모임 '산사랑' 창립 회장
2000 참여연대 운영위원
2000 서울시 청렴계약옴부즈만 초대 옴부즈만
2008 아름다운 재단에 '호민 기우봉 유산기금' 출연



박상표 1969. 1. 23 ~ 2014. 1. 19

박상표 선생님은 전문가이자 운동가로서 사회변화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파헤쳐 2008년 거대한 촛불시위의 견인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시민운동가는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한다”던 선생님의 강연과 연설은 치밀한 연구와 조사에 바탕을 둔 것이었기에 언제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역사와 지리에도 해박했던 선생님은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언제나 책임감 넘치고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69 전라남도 여수에서 출생
1996 수의사 면허 취득
1997 참여연대 회원 가입
2003 참여연대 회원모임 '우리땅' 회장, 참여연대 운영위원
2006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편집국장
2006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2008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정책자문위원



오재식 1933. 3. 26 ~ 2013. 1. 3

“현장의 감동은 늘 나를 설레게 했다” 오재식 선생님은 팔십 평생을 현장의 한가운데서 운동가로 살다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은 기독교사회운동의 존경받는 선구자였지만 언제 어떤 자리에서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기독교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반독재민주화운동, 국제인권운동, 통일평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과제와 씨름하셨습니다. 후배 운동가들에게 늘 현장과 상상력을 강조하셨던 선생님을 우리는 ‘영원한 청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1933 제주 추자도에서 출생
1971 아시아기독교협의회 도시산업선교부, 국제부 간사
198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훈련원, 통일연구원 원장
1988 세계교회협의회(WCC) 개발국장(CCPD) 제3국장(JPIC)
1994 참여연대 창립대표, 크리스찬아카데미 한국사회교육원 원장
1997 월드비전 한국 회장, 월드비전 국제본부 북한국장
2002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이상희 1929. 4. 29 ~ 2010. 7. 9

이상희 선생님은 한국 비판언론학의 선구자로서 7,80년대에는 군사정권 비판으로 고초를 겪으셨고, 이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창립과 한겨레신문 창간에 기여하셨습니다. 27년간 몸담았던 대학에서 은퇴하신 후에는 공익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도, “이 나이 먹도록 하던 것이 공부인데, 공부로 도움을 주어야지” 하시며 학자의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참여하는 지식인’으로 평생을 살고자 하였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1929 경상남도 고성에서 출생
1967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교수
1995 상지대학교 이사장
2000 KBS 이사
2001 한성대학교 이사장
2002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007 참여연대 고문



허세욱 1953. 5. 9 ~ 2007. 4. 15

허세욱 선생님은 ‘민주택시기사’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한독운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던 날 선생님은 “10년 소원을 풀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행동하는 노동자였고 가슴 따뜻한 시민이었습니다. 박봉을 쪼개 여러 사회단체를 후원하셨고, 실천의 현장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와 대열의 맨 뒷자리를 지켰습니다. 2007년 4월 1일 한미FTA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망국적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여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1953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
1991 한독운수 입사
1994 봉천동 강제철거에 맞서 투쟁
1998 참여연대 회원 가입
2007.4.1 서울 하얏트호텔 앞에서 분신
2007.4.15 한강성심병원에서 운명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보통사람 - 회원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참여연대에는 14,500명의 드림메이커들이 있습니다.
1994년 304명으로 출발한 참여연대는 지난 20년간
3만 회원들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정도, 낙선운동도, 통인동 사옥도, 서울광장
조례 개정도 회원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지지와 응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공익로비단, 정보공개청구단, 시민고발단으로 직접 나서고,
참여연대가 있어야 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와 깃발을
들어 주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자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스무살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기적을 만드는
회원들의 힘을 믿고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회원모임 - 서로 뜻이 맞는 회원들이 소모임을 만들어 즐거운 참여연대를 만들어갑니다

등산모임 산사랑/노래모임 참종다/마라톤모임/청년마을/
사진모임 참여현상소/경기남부사랑방(이상 현재 운영되는
회원모임) 답사모임 우리땅/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
작은권리를지키는사람들/통일희망모임/백두대간
탐사모임/외오름/풍물모임 막사발/시민운동공부모임/
사회봉사모임/어깨동무/대학생 공부모임
결식필독/영상동호회/언론개혁모임/자원활동모임
낚새밤쥐/참임자모/부산경남지회회원모임/속년회/
청년로비단/참깨/열사모/시민로비단/청소년모임 “와”/
그들의 어머니회/만화사랑/공차며연대



Interview ~

청년이 청년에게 이현정 회원



"안녕, 참여연대야~ 스무 살이 된 것 정말 축하해!

같은 청년세대가 된 참여연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잠깐만 들어줄래?

나는 네가 청년들의 고민을 보다 세심하게 들어주면 좋겠어. '청년'이라고 해서

하나의 덩어리는 아니야. 대학교1,2학년,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3,4학년, 직장생활을

하는 20대 중후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20대 들의 문제는 다 다르거든. 단순히 멍석만 깔다고 될 일은 아니야.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이 스스로없이 모일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 되면 좋겠어. 특히 청년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줘.

갓 사회에 나온 애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혹시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한다면 청년들은 이곳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참여연대야, 우리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함께 해줄 수 있지?"



지난 20년간 함께 기적을 일구어오신 회원들입니다. 함께 한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대 뒤의 숨은 스태프 - 자원활동가

연극이 시작되면 우리는 무대 위의 배우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공연이 끝날 때까지 배우보다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조명, 의상, 음악 등 각 분야별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스태프들이 없다면 연극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데스크, 카페지기, 우편발송과 전화작업을 비롯해 자료의 취합과 분석, 번역, 강좌 준비, 사진촬영과 영상편집 등 곳곳에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들이 참여연대라는 '작품'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쫓개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며, 참여연대의 한 축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주신 자원활동가들이 없었다면, 참여연대 20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Interview ~

참여연대의 오랜 파수꾼

최장기 자원활동가 홍천희 선생님



"우리세대에서는 여기 와서 일한다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듣기 딱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화가 되니 좋아요. 노소의 격이 없고, 기본적으로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느끼지요. 참여연대에 오지 않았으면 얻지 못했을 값진 소득입니다"



지난 20년간 스태프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신 자원활동가들입니다. 함께 한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식과 열정으로 무장한 전문가 - 임원

리영희 선생은 “어떤 개인의 지식이나 사상은 그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회의 계발을 위해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알리고 바로잡고 깨우치는 것이 지식인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지요. 참여연대에는 그 책임과 의무에 눈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임원들입니다. 전문가 임원들은 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생산하며, 법안을 성안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장시간 토론과 밤샘 작업, 거리 기자회견과 집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1000명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참여연대와 함께 했으며, 지식과 열정을 쏟아 수 많은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참여연대 임원은 전문가 임원들과 더불어 회원대표들로 구성됩니다. 각 회원모임 대표, 총회준비위원회가 추천한 회원, 지역·연령·성별 등 비율에 따라 추첨으로 뽑힌 회원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여연대 활동과 운영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2014년 113명의 운영위원 중 96명이 회원대표들이며, ▲조직운영 ▲사회경제 ▲시민감시 ▲평화국제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분기별 활동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회원 대표들로 이루어진 참여연대 임원은 참여연대의 엔진입니다.



Interview ~

우리가 뛰는 만큼 바뀌는 세상!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과 실행위원들은 더 이상 쏟아 낼 열정과 시간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더 새로운 활동과 역할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내라고 독려해야 하는 집행위원장의 역할은 슬프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해 참여연대 20주년 준비를 시작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참여연대 팬티 벗고 뛰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뛰는 만큼 세상이 바뀐다면 못할 것도 없지요 지난 2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활동기구를 책임져주신 임원들입니다. 함께 한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참여연대’호의 승무원 - 상근활동가

상근활동가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참여연대’호의 승무원입니다. 함께 탄 회원과 임원, 자원활동가들이 믿고 몸을 맡길 수 있도록 최적의 항로를 유지하는 일이 상근활동가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일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늘 파도의 움직임을 살피고 선박을 정비하며, 갑작스런 태풍과 암초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상근활동가들은 꼼꼼한 감시자이자 행동하는 현장가이며, 계획을 짜는 설계자이자 소통하는 조직가입니다.

창립 때부터 20년간 모두 250여명의 승무원이 참여연대호의 항로를 개척해왔고, 지금은 54명의 상근활동가들이 승무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참여연대’호의 승무원으로 책임을 다하신 상근자입니다. 함께 한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Interview ~
상상력을 소중히 여길래요 박성은 2014년 신입간사

“저는 참여연대가 상상력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의미가 있어서하는 활동만이 아니라 시민들과 즐겁게 무엇인가를 하는 중에 의미를 찾는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연한 투쟁의 의지나 도덕적 선의가 없어도 그냥 재미삼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참여연대가 된다면, 주말 집회현장보다는 휴식이 우선인 제가 활동가로서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고민도 해결되었지요. 스무 살 참여연대와 함께 저도 쑥쑥 성장할게요!”



내가 꿈꾸는 참여연대 이대훈 1994년 초대 사무국장

“저는 참여연대가 아름다움을 추구했으면 합니다. 멈춘 시간속의 아름다움, 색채와 디자인이 있는 아름다움, 달음과 달램이 있는 아름다움, 석임과 흔들림이 있는 아름다움, 소리와 리듬이 있는 아름다움, 침과 숨이 있는 아름다움, 아픔과 아파함이 섞이는 아름다움, 진부함과 반복을 거부하는 아름다움, 갈래치면서 회오리치는 언어의 아름다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섬세함의 아름다움, 순간을 손바닥에 움켜쥐고 비상하는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곳이면 하고 희망합니다. 그래서 100년을 디자인하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합니다.”



간사 조희 모습
10년 전(2004, 위)
현재(2014, 아래)

참여로 쓴 역사 - 20년의 현장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참여연대 명장면 20가지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담지 못한 수많은 활동과 사연을 포함하여 참여연대가 이룬 기적들은 모두 우리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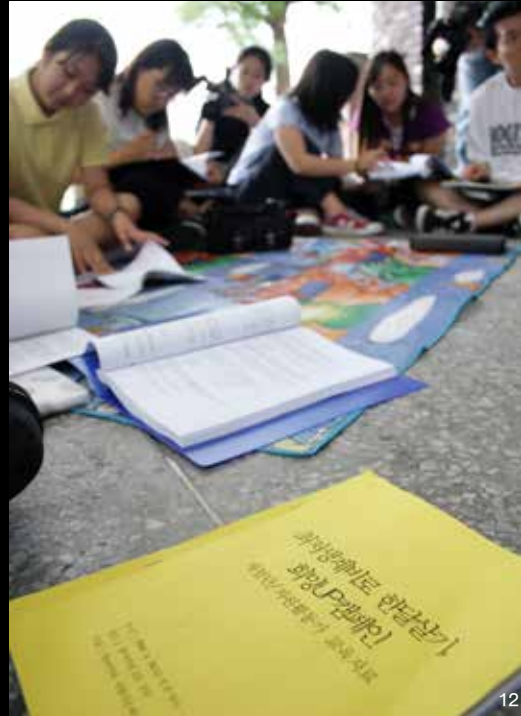


- 1. 1994-09-10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 2. 1994-12-05 사회복지위원회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 기자회견. 이 소송을 통해 노령수당 확대 지급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 3. 1995-06-08 '사법 1백년의 반성과 사법개혁의 과제' 토론회. 사법감시센터는 참여연대가 창립 당시 가장 집중한 활동기구였다.
- 4. 1996-10-23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부패방지법은 이로부터 5년 만인 2001년 7월 24일 제정되었다.
- 5. 1997-08-01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제2차 참여연대 회원 여름캠프 "불타는 참여, 뜨거운 연대"
- 6. 1998-09-09 5대 재벌 계열사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국민 10주 갖기 운동.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1999년 4개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 7. 1999-11-11 서울시 등 정부기관장 판공비 내역 공개 촉구대회. 이후 판공비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승소하였다
- 8. 2000-02-02 2000총선시민연대 제2차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 최종 낙선대상자 86명 중 59명을 낙선시켰다.
- 9. 2000-12-04 삼성의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 촉구를 위해 국세청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윤종훈 회계사는 사상 최초의 1인 시위자가 되었다.
- 10. 2002-05-14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 집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였다. 사진은 1999년 주민설명회 장면.

참여로 쓴 역사 - 20년의 현장



11



12



14



15



16



17



18



19



20

- 11. 2003 평화군축센터는 출범과 동시에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에 돌입하였다. 파병반대운동은 2008년 우리 군대가 철군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 12. 2004-06-26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 '희망 UP'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 13. 2005-10-28 1998년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사진은 1999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는 장면.
- 14. 2007-08-10 회원과 시민들의 힘으로 마련한 참여연대 통인동 사옥에 입주하였다. 2014년 추가로 공사를 하여 카페, 교육장 등 시민공간을 대폭 넓혔다.

- 15. 2008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 촛불집회는 여름 내내 계속 되었고, 당시 박원석 협동사무처장과 안진걸 탐장이 구속되었다.
- 16. 2009 서울광장 조례 개정 캠페인 사진. 서울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조례개정 청원을 냈다. 허가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신고만 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17. 2010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 규명 활동. 보수단체들이 참여연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빚어졌으나, 시민 1800명은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했다.
- 18. 2011-12-29 2007년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선거법 93조 1항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 19. 2012-11-15 참여연대가 제안한 생활임금을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수용했다. 이제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 20. 2013-11-09 국정원 선거개입에 항의하는 참여연대 회원들의 민주주의 행진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졌다

특권과 부정부패가 없는 맑은 사회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_1994. 창립선언문

시민의 공복에 불과한 이들이 온갖 비리와 권력을 휘두르며 군림하는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은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근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이 사라지고, 국민 앞에서 공정한 사법부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사법권력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관료들의 투명한 행정과 공직 윤리를 촉구하며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을 감시해왔던 이유입니다.

반부패운동에서 관료감시운동까지

창립 첫 해 검찰과 경찰, 세무서 공무원들의 뇌물공여를 고발하고, ‘내부비리제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청원하는 것으로 반부패운동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996년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선언하고, 언론기획과 시민캠페인 등을 통해 2001년 법률 제정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청렴계약제 도입, 공직자윤리법 개정 요구,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실태 조사 등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공직사회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의인상 시상 등으로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잣대는 전직 대통령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대선개입과 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발본적 개혁은 여전히 집중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주요활동

- 공익제보자 개인별 보호조치 및 법률구조 지원 (1994~)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입법운동 (1994~)
- 부패추방을 위한 맑은사회만들기 운동 전개 및 부패방지법 입법 운동 (1996~2001)

- 자금세탁방지법 입법 운동 (1997~2004)
- 서울시 시장 및 25개 구청장 업무추진비(판공비) 정보공개소송 및 공개운동(1998)
- 검찰총장 부인 연루 옷로비 사건(1999) 및 김대중정부 ‘이용호게이트’ 사건 특별검사 수사 촉구운동 (2001)
- 예산낭비 방지 및 환수를 위한 ‘납세자소송법’ 입법캠페인 (2000)
- 서울시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음부즈만 도입운동 (2000~2003)
- 정부 주요 정책결정회의 회의록 공개요구 운동 (2000~2006)
-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 운동 (2001~)
- 정보공개법 개정 입법 운동 (200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입법 운동 (2002~2010)
- 언론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 등 회의록 공개운동 (2004)
-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2005)
- 삼성그룹 불법로비 및 안기부 X파일사건 수사촉구운동(2005)
-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모니터 연차 보고서 발간 (2006~)
- 도박게임사태, 의약품중환유통정보시스템, 불량방독면, 미국산 쇠고기협상 관련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2006, 2008)
- 의인상 시상 및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2010~)
- 국무총리실 및 청와대의 민간인불법사찰 진상규명운동 (2010)
-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2010~2012)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특검업무경비 유용 관련 고발 (2013)
- 이명박 전 대통령 내국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2013)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 촉구 (2013)
-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 (2013)

특권층과 재벌에 무기력한 사법권력을 겨냥하다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사람들은 권력의 시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무리하게 수사를 하거나 정치권력과 재벌 등 특권층 앞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인색한 재판부의 구성과 그 판결도 한국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사법개혁 활동은 지난 참여연대 20년 활동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주요활동

- 언론기획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진행 및 ‘국민을 위한 언론기획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진행 등 사법개혁 과제 공론화 활동 (1995~1996)
- 국내 유일 사법감시 전문 부정기 간행물 ‘사법감시’지(誌) 발간 (1995~2010년 30호)
- 판검사 법조인 자료실 운영 (1996~2000년대 초반)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모니터 (1997~2007)
- 의정부 법조비리 관련 판사 전원 406명 시민고발 (1998)
-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 발표 (2002)
- 배심재판 도입 입법운동 (2003~2007)
- 특별검사제 도입 및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위한 입법 운동 (1997~)
- 대법관(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1999, 2003~)

- 김대중정부 5년 검찰백서 발간 (2003)
- 로스쿨 도입 및 변호사자격시험화 입법운동 (2003~2007)
- 퇴직 판검사 개업지 조사보고서 발표 및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퇴직 판검사 사건수임 제한 입법운동 (2004~)
- 판결비평문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 및 좌담회 <법정 밖에서 본 판결> 개최 (2005~)
-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발표 (2006)
- 변호사징계정보 공개 요구 운동(2006~)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사이트 개설 (2007)
-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시민캠페인’(2008~)
- 이명박 정부 5년 연차별 검찰보고서 발간 (2009~2013)
-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따른 대법원 판결의 변화” 보고서 발표 (2011)
- 검찰권 오남용 검사 46명 명단 선정 (2012)
- 로스쿨 도입 5년, 로스쿨운영 점검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 (2013)
- 상설특검제 제정 촉구 활동 (2013)
- 검찰 주요 사건 및 책임자 DB <그 사건 그 검사> 운영 (2013)
-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근무 실태보고서 발표 (2008, 2013, 2014)

불통 정치, 닫힌 국회를 내버려두지 말자

부패한 정치인을 국회에 발 딛지 못하게 하는 것, 후진적인 한국 정치를 탈바꿈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지난 20년은 정치개혁을 끈질기게 촉구하고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시민단체 최초로 국정감사를 밀착감시하면서 부패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부패로 연결되는 돈 선거를 추방하고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정기국회 때마다 처리해야 할 법안과 정책목록을 발표하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비례대표 확대와 시민들의 참정권 보장, 투명한 입법 활동 등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국회 나아가 한국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 NGO선거운동금지규정 철폐와 유권자운동 보장촉구 선거법 개정 캠페인(1995)
- 선거연령 20세 헌법소원 (1996)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1997)
- 국회의원 겸직 및 주식보유 현황조사 및 이해충돌되는 상임위 배정 헌법소원 (1998~2003, 2006)
- 정기국회 즈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및 입법과제’ 발표 (1998~)
- 정당 회계 및 국고보조금 사용실태 연례조사 및 감사 청구 (1999~2002)
- 국정감사 모니터 및 평가를 위한 ‘국정감사 시민연대’ 운영 (1999~2000)
- ‘2000 총선시민연대’ 결성 및 낙천낙선 범국민캠페인 (2000)
- ‘2002대선유권자연대’ 결성 및 대선자금 감시 및 정책 제안 활동 진행 (2002)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정치개혁시민연대’ 활동 및 MBC 공동기획 ‘정치를 바꾼시다’ 캠페인 진행(2003~2004)
-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2004)
- ‘2004 총선시민연대’ 결성 및 부적격 후보자 정보제공캠페인(2004)
- 국회의원 및 의정활동 모니터 사이트 <열려라 국회> 개설 (2004)
-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 모니터 보고서 <국회 이슈리포트> 17회 발간 (2004~)
- 국회개혁과 국회윤리강화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 등 입법운동(2005~)
- 대선후보 정책검증을 위한 ‘100인 유권자위원회’ 구성 및

- 운영 (2007)
- 유권자 표현 규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소원(2007)
- 유권자 선거참여 제한하는 선거법 등 개정 캠페인(2007~)
-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결성 및 ‘기억/약속/심판 온라인 유권자운동’ 진행(2012)
-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 촉구 위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활동 (2011~2012)
-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입법 운동 (2013)
- 폐쇄적인 국회운영과 제도개선 촉구 위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캠페인 (2013)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여기서는 가만히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해.
이 정도는 뛰어야 뒤처지지 않아. 어딘가를 달거나 앞서가려면,
이것보다 곱절은 더 빠르게 뛰어야 해."



2004년 7월 성북구 하월곡동,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체험단

붉은 여왕이 지배하는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살림살이 걱정이 떠나지 않고, 불안한 일자리에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어렵게 경쟁사회를 버텨낸 뒤에 다가올 노후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불온시 되기 일쑤입니다. 반면 갈수록 부는 특권층에게 집중되고 있고 이들의 영향력도 막강합니다. 참여연대는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처럼 거대한 경제권력에 맞서고 횡포에 짓눌린 약자들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헌법상의 권리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국가의 공적 책임을 요구하며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참여연대가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은 참여연대가 창립과 함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전개하면서 내 건 구호이자 20년 사회복지 운동의 기본 전제입니다. 국가가 모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대신하여 공익소송에 나섰습니다. 복지에산 확보는 물론 시민과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함께 노후 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힘써 왔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의 민주성, 투명성을 강조하며 연금개혁을 요구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사회복지운동은 제도개선을 넘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시작 (1994.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시작(1994~))
-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 취소소송(1994),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에 따른 손해 관련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위헌소송(1995) 등 공익소송 제기
-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1995)
- 월간 '복지동향' 발간 (1998~)
- 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만들기 시민합의회의 (2001)
- 알바 권리 찾기 캠페인 (2002)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 운동 (2004~)
-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 UP 캠페인 (2004, 2010)
-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사회권 의견서 제출 (2008)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운동 (2009~)
- 간주부양비 폐지 위한 공익소송 (2009)
- 지방선거 복지공약집 <복지를 알면 민심이 보인다 발간 (2010)
-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 토론회(6회) 개최 등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논의 (2010~)
- 서울복지필름 페스티벌 개최 (2011, 2012)
-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 활동 (2012~)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활동 (2013~)
-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활동 (201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저지 활동 (2013~)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2014)
-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 (2014)

공정한 경제질서를 위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심각한 수준에 이른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참여연대가 주목해왔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이들의 불투명한 경영과 전횡, 불공정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거대 재벌에 맞서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운동은 법전에만 있던 주주대표 소송권을 이용하여 경영진에 책임을 물었던 소액주주운동입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물론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부당한 경영정책결정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고,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2006년 경제개혁센터의 독립 이후 참여연대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은 물론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금융시장이 각종 규제완화와 개방조치로 취약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을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직무유기와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조세징의를 위해 재벌들의 증여나 고소득층에 과세하도록 하고, 부자 감세를 철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 한보그룹 부실대출 관련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1997) 이후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998), LG 주주대표소송 (2003), 대상 주주대표소송 (2005) 진행
- 제일은행, 삼성전자, SK텔레콤, 외환은행 주주총회 참석 및 SK 텔레콤, 현대 중공업, 데이콤 등 소액주주의 요구사항 관철 (1997~2002)
- 삼성전자가 이재용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1997)
- 5대 재벌 계열사 소액주주운동 전개를 위한 국민 10주 갖기 운동 (1998)
-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운동 (1998)
-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무효소송 및 배임혐의 고발(1999~2005)
- 삼성 이재용으로의 변칙증여 심판행동 (2000~2001)
-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운동 (2002~2004)
- 소수주주권 강화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 (2000~2003)
- SK 최태원 회장 등 배임혐의 고발 (2003)
- 세풍사건, 나라중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등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운동 (2003~2004)
-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관련 삼성 이근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 (2007)

-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막기 위한 법 개정 반대 운동 (2006~)
-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한국판 버핏세) 세법 개정안 입법 청원 (2011)
- 저축은행 사태관련 국정조사 요구와 금융당국 책임규명 활동 (2011~)
- 룬스타 시민소환운동 (2011~)
- 대선후보 경제민주화 공약평가(2012)
- 공평과세와 부자 증세를 위한 BEST 6' 발표 (2012~)
- 동양그룹 사태 등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입법청원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운동 (2012~)
- 라웅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비자금조성 관련 금융위, 국세청 등 감사 청구(2013)
-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은행법 위반 고발 (2013)
-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운동(2013~)

민생 살리기와 갑을개혁 운동

헌법상의 기본권은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는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권리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참여연대는 일상에서 하찮게 취급당하거나 권위적인 행정처리로 부당하게 침해받는 권리들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권리들을 실현하고, 서민의 생활 안정을 어렵게 하는 정책들을 바로 잡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주민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피해에 대한 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보험사의 고객정보 무단유출 고발, 아르바이트생의 수당미지급 고발 등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 활동이었습니다. 부당하거나 근거 없는 세금 징수를 없애기 위해 시민과 함께 소송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호응했던 이동통신요금인하 캠페인이나,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 등을 포함해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참여연대 활동은 거리와 국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의 결실입니다.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생존 위협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가맹점주들과 함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고 이들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규모의 ‘을’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주요활동

- 한겨레 21 공동으로 ‘작은 권리를 찾자’ 40회 연재 (1997)
- 전파사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지하철 운행지연, 김포공항 소음피해,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 등 공익소송 제기(1998~2005)
- MBC 라디오 <여성시대> 찾은 권리찾기 캠페인 진행 (1999)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운동 및 제정 후 개정 촉구 활동(2000~)
- 이동통신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전개 (2001) 및 * 이동통신요금 8.3% 인하 성과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활동 (2001~)
- 대부업계 폭리 규제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 입법운동 (2007~)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연대활동(2008)
- 등록금넷 결성, 등록금 인상근거 관련 정보공개소송 제기, 대학 등록금 관련 입법 활동 등 등록금인하운동 전개 (2008~)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발족 및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촉구 활동 전개 (2008~)
-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결성 및 SSM 규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캠페인 전개 (2009~) 중소기업친화적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2011~)
- 친환경무상급식운동 (2009~)
- 주거단체들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결성 및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사업 개선 촉구 활동 전개 (2010~)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및 요금 담합 의혹 제기 등 요금인하운동 전개 (2011~)
- 대기업 불공정행위 관련 공정위 신고 및 소송 제기, 입법 활동 전개 (2012~) ‘전국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살리기 비대위’(‘을’살리기 비대위) 피해 사례 공론화 활동 전개
- 서민금융관련 6개 법안 입법 활동 전개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파산법 개정안, 채권추심법 개정안,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보증인보호특별법 개정안) (2012)
- KTX 민영화저지를 위한 연대활동 (2012)
- 업무상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 고발(2013)
- 용산 화성경마도박장 입점 저지활동 (2013~)
-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 제기 (2014)
- 경향신문과 공동기획, 작지만 소중한 권리 ‘소소권’ 연재 (2014)

당당하게 노동권을 요구하는 사회를 위하여

일자리와 노동권 보호가 없는 사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 노동사회위원회 출범 이래 참여연대는 계약직, 특수고용, 파견, 용역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노동권을 무시하는 기업들을 고발하고, 이들과 현장에서 연대하며, 노동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동정책 수립과 노동행정을 촉구해왔습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고용보험을 확대하며, 노동현장의 안전을 위해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임금으로 ‘생활임금’ 도입을 제안, 노원구, 성북구에 이어 서울시, 경기도의 생활임금 도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활동

- 공공부문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 발간 (2007, 2010)
- 취약계층 노동실태 고발 ‘우리 사회 노동히어로가 말한다’ (2008, 2009)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공기업 및 기업 일반의 노동부문 실태보고서 발간(2008, 2010),
- 이랜드 불매운동 (2007), 기륭전자 비정규직 부당해고 (2008),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및 복직 지원활동 (2009~),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대응 (2011) 등 현장 연대 활동
- 이영희 노동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2009)
-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운동(2009)
-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2009~)
- 이수리포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문제점’ 발간 등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응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운동 (2010~)
-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운동 (2010~)
- 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청년고용 실태보고서 발간 (2010)
-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2010)
- 생활임금 도입 운동 (2012~)
- 공공기관 비정규직,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 발간 (2012, 2013)



2012년 3월 청계광장. 제주강정마을 구림비 발파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

국경을 뛰어 넘는 평화인권공동체

“천안함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느냐”

2011년 헌법재판관에 추천된 조용한 변호사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질문입니다.

정부 발표를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권여당은 조용한 후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앞서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조사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한 참여연대도 냉전세력으로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북간의 대결, 맹신을 요구하는 냉전의 논리, 성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군사안보 분야. 이러한 성역을 깨기 위해 참여연대 평화운동은 부단히 도전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지구촌 평화와 연결되어 있듯이 한 국가의 민주화의 열기는 이웃국가로 전파됩니다. 한국사회 개혁에 매진해 온 참여연대는 주변국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넘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배우고 나눌 것도 많아졌습니다

안보국가에 정면으로 맞서다

권력감시운동에 집중해 온 참여연대는 적나라한 한국사회의 냉전구조에 직면하게 됩니다. 군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데, 국방 분야는 외부감시 자체가 터부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세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대테러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고, 북미간의 핵갈등이 한반도 핵전쟁 위협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 한반도 평화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일면 대립하면서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관계, 성역화된 국방정책과 군사안보 우선주의, 불균형한 한미동맹의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평화행동을 조직해나갔습니다.

주요활동 및 성과

- 차기전투기사업 (F-X) F-15 구매 반대 캠페인 (2001)
-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 부시 대통령 사과와 한미SOFA 개정 촉구 활동 (2002)
-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 활동(2002~), 제주전국대책회의 발족 및 구림비 살리기 시민행동 전개 (2011~)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촉구 활동 (2003~)

-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이라크 파병 반대 집중행동 (2003~2008)
-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의견 청원 (2004)
- 평화미군기지이전협정 재협상 촉구 활동 (2004~2007)
- 평화활동가 대회 개최 (2004~2013)
- 유엔 PKO법 제정 대응 및 해외 파견 한국군 활동 모니터 (2005~)
- 평화국가만들기 연례 심포지엄 (2006~2009)
- 방위비분담금협정 재협상 촉구 활동(2007~2014)
- '시민, 안보를 말하다' 연속개최 및 평화학교 진행 (2007~2011)
- 한반도 평화보고서 및 평화백서 발간 (2003, 2005, 2008, 2010)
- 핵군축보고서 발간 (2009, 2010, 2012)
- 아태지역 MD 반대와 군비경쟁 종식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 등 MD 배치 저지활동 (2009~)
-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규명 촉구 활동 (2010)
- 연례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2010~2013)
- 연례 세계군축행동의 날 개최 (2011~)
- 핵안보정상회의 대응(2012)
- 한미원자력협정개정 대응 및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활동 (2012~)
- 한일군사협정 체결 반대 활동 (2012~)
- 정전 60주년 캠페인 진행, 한반도 평화안내서 '뽀로로는

-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발간 (2013)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규탄 집회 (2014)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참여연대의 연대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으로 시작한 국제사업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경험과 인권 증진 활동 경험을 아시아 여러 단체들과 나누고, 아시아 국가들의 현안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에 공적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서 원조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ODA 정책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취득하여, 유엔의 메카니즘을 활용해 한국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 해외진출기업 감시활동 (1995~, 1997년 국제민주연대 독립)
- 참여연대 활동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Asia Solidarity Quarterly (1999~2003) 발간
- 버마 인권탄압 및 민주화 운동 지원 위한 웹사이트 운영 (2004~2009)
-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 기관으로 등록 (2004)
- 칼럼 '아시아 생각' 발간 (2007~)
- 아시아 이해 증진을 위한 강좌 프로그램 진행 (2007~2012)
- 광주아시아포럼 연례 워크숍 개최 (2008~)
- ODA 정책 모니터 보고서 연례 발간 (2008~2013)
- 긴급청원, 개인진정 등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활용 (2008~)
- 필리핀 사회운동가 피살, 말레이시아 선거개혁운동 탄압, 티벳 유혈진압 등 아시아 지역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행동 및 인권옹호자 지원활동 전개 (2008~)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심포지엄 개최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파트너십 강화 (2009~)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SDMA) 발의 (2010)

- G20 정상회의의 공동 대응 (2010)
- 아이티 참사 모금활동 (2010), 시리아 난민지원 모금 활동 (2012)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대지진 관련 추모행사 진행 (2011)
- 아랍의 민주화 운동 관련 이야기 마당 개최 (2011)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연대체(KoFID) 활동(2011~)
-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사항 이행 검토 보고서 발간 (2013)

참여연대가 함께 한 국제네트워크

- 포럼아시아 FORUM-A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1997~)
-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ANFREL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2000~)
-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PAC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2004~)
- 아시아평화네트워크 APA (Asian Peace Alliance, 2002-2009)
- 국제원조체제 감시네트워크 ROA (Reality of Aid, 2009~)
- 세계시민단체연합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2010~)
- 아시아민주화운동을위한연대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2010~)



2008년 7월 시청광장.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에 참여한 시민들 사진 이영동 회원

참여하는 주인들의 세상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_역사학자 에릭 홉스봄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감시자로서 참여할 때만 참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여연대의 모든 활동은 시민을 향해 있으며, 활동의 성과도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감시, 대안, 연대 그리고 참여를 주요한 활동방향으로 삼고 있는 이유도 합니다. 실제 한국사의 물줄기를 바꾼 참여연대 활동의 배후에는 묵묵히 지지해주신 회원들은 물론,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해왔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가 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탄탄한 뒷심은 바로 회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회원들과 시민들의 존재였습니다. 시민, 회원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모범적인 사례로 참여연대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보면 회원과 시민들은 시민로비단이나 회원모니터단의 일원으로서, 혹은 자원활동가, 느티나무지기, 그리고 인턴으로 참여연대 활동에 동참해왔고, 친목과 취미를 공유하는 회원모임 등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거리와 온라인에서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여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 토론회 등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인턴십과 청년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스펙 경쟁에 치여 사는 청년, 청소년 세대들이 새로운 세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9년 다시 문을 연 <아카데미스티나무>는 목마른 이들에게 샘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2002년을 마지막으로 6년 동안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운영되었던 <참여사회 아카데미>의 경험을 살리되, 보다 일상적이면서 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아카데미 강좌는 많은 시민들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진보-인문-행복을 모토로 하는 <아카데미스티나무>의 풍성하고 알찬 강좌에서 참여연대는 매년 수백 명의 강사와 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간도 교육장이자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을 활짝 엽니다.

참여연대는 삶의 현장에서, 입법의 현장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기득권의 부패와 유착관계를 견제하는 활동이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국회에서 법률안으로 다뤄지고, 통과되려면, 그리고 제도로써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켜보면 참여연대 20년은 시민들이 유권자, 납세자, 소액주주, 자영업자, 노동자 등 권리의 주체로서 참여해왔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기업 횡포를 막아내는 제도개선책을 입법화하는 데 중소상인들이 함께 했었고, 끝 모르게 오르던 대학교 등록금을 잡아두려는 노력에 대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언제나 더 많은 회원과 시민의 참여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 (1994~2014 총 382 강좌 프로그램 운영)

- <참여사회아카데미> 운영, 117개 강좌 프로그램 진행 (1996~2002)
- 사회복지위원회 '복지학교' 개최 (1994~1998, 2007~2010)
- 시민교육사업을 위한 교육 TFT 구성, 시민교육 강좌 진행 (2007~2008)
- 평화군축센터 'DMZ에서 바그다드까지'를 시작으로 '평화학교' 개최 (2007~2011)

-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강좌' 진행 (2007~2012)
-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강좌 진행 (2007~2009)
- 참여여사회연구소, 서울시교육연수원으로부터 교사 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 승인(2008)
-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시민교육, 경제교육, 한국사회 이해 등 7회 진행 (2008~2012)
- 진보-인문-행복을 모토로 재오픈 (2009), 각 부서 강좌 통합 진행
-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나누어 연간 40~50개의 강좌 프로그램 운영
- 2009년~2014년 5월 현재, 225개 강좌 진행
- 2013년 8월 현재, 4,800여 명 수강, 260여명 강사 참여

인턴십

- 청년 연수 프로그램 5회 진행 (2006~2007)
- 인턴십 14기 배출 (2008~2014)
- 국제연대 인턴십 /펠로우십 7회 운영 (2008~2013)

세상을 바꾼 공익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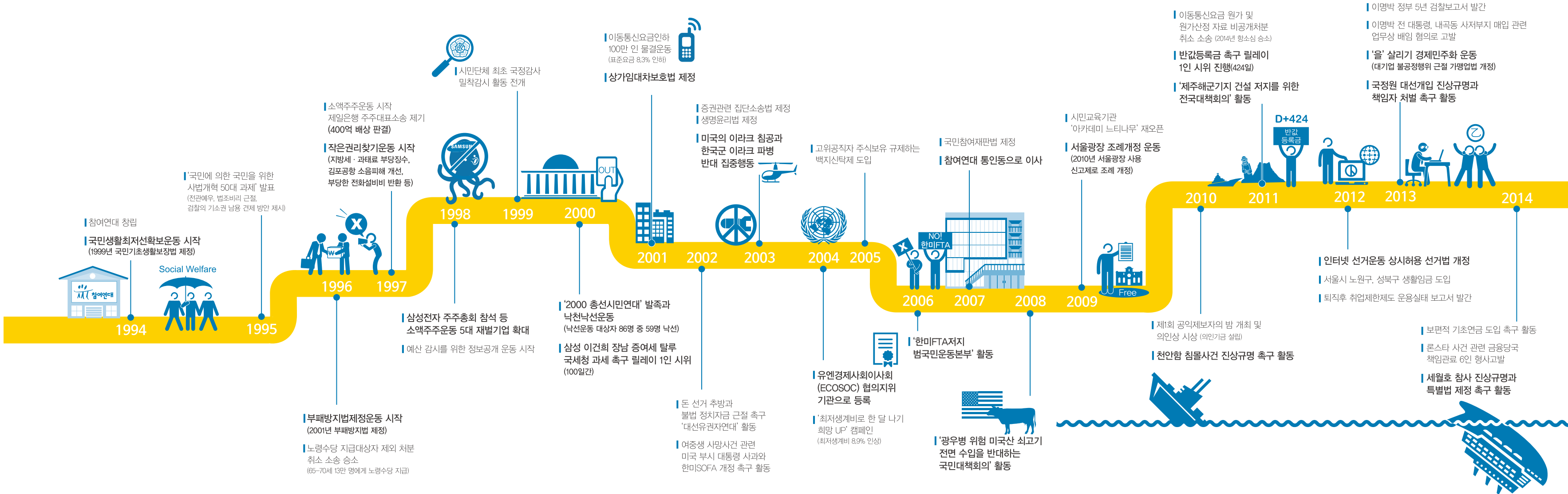
1994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1994) 승소
1995	웅진축협 군납비리 제보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1995) 승소
1997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1997) 승소 삼성전자 전환사채 전환금지가처분신청(1997) 승소
1998	삼성전자 주주손해배상 청구 소송(1998) 승소 불법체포 및 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강현일 건)(1998) 승소 지하철공사의 지하철운행지연 관련 손해배상소송(1998) 승소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 외화도피혐의 등 고발(1998), 세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혐의인정(2006.7.14)
1999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 손해배상소송(1999) 승소 불법체포 및 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김상태)(1999) 승소 서울시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1999) 승소 현대중공업 손해배상소송(1999) 승소 현대전자 주가조작관련 손해배상소송(1999) 일부 승소 삼성SDS 신주인수권 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1999) 일부 승소 전파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1999), 전파사용료 폐지
2000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천은사)(2000) 승소 전과기록유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2000) 승소 비닐하우스촌 전입신고거부 취소소송(2000) 승소 김포공항 소음피해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 일부 승소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 취소소송(2000) 승소 서울시의 판공비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00) 승소 서울시 24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소송(2000) 승소 국회에비금지출증빙 등 장부일체징보 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00) 승소
2001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 등사거부처분 취소소송(2001) 승소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소송(2001) 승소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2001) 승소
2002	삼성생명개인신용정보 불법유통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2002) 승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02) 승소 KTF부가서비스부당가입손해배상청구소송(2002) 일부 승소
2003	LG석유화학 저가 매각 관련 주주대표소송(2003) 승소 SK 최태원 회장 등 배임혐의 고발(2003), 구속기소
2005	보건복지부의 항생제투여관련 의료기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5) 승소 대상그룹 위장계열사통한 비자금 조성 등 횡령관련 주주대표소송(2005) 일부 승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배임 3차 고발(2005), (1999년 1차, 2002 2차 고발 이후 3차 고발, 삼성특검 재판에서 이견회 회장 포함 삼성SDS 이사들 유죄 확정 판결(2009))
2006	제일모직 혈값전환사채 인수포기 주주대표소송(2006) 일부 승소 검사징계사유 정보공개청구소송(2006) 승소
2007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헌법소원(2007) 헌정위헌 결정 비닐하우스촌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 취소소송(2007) 승소
2008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위헌법률심판제청 (2008), 헌법불합치 결정
2009	연세대 등록금-적립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09) 승소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09) 승소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2009), 위헌결정
2010	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2010), 위헌결정 네이버, 통신 자료 제공 손해배상청구소송(2010), 2심 일부 승소, 진행 중 기간제한 없는 검찰의 이메일 압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2010), 1심 일부 승소, 진행 중
2011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 관련 자료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2011), 항소심 승소, 진행 중
2012	제일저축은행 고객정보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2) 승소
2013	대한문앞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2013) 승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2013) 1심 일부 승소, 진행 중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 1심 승소, 진행 중

세상을 바꾼 입법 활동

1994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 2010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2013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1995	전직대통령에우에관한법률안 개정청원, 부분 반영
1996	부패방지법 제정 입법 청원(1996, 2000), 2001 부패방지법 제정 ↳ 2004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부여 등 <부패방지법>개정안 입법청원 ↳ 2013 부패방지법 개정 입법 청원 검찰청법 개정청원2001, 2011 개정안 입법 청원 상속세법 개정청원, 부분 반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부분 반영 노인복지법 개정청원, 부분 반영
1997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청원, 전면 반영 ↳ 2010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01 개정안 입법 청원 ↳ 2012, 2013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19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청원,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2003, 2004, 2005 개정안 입법 청원2009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개정안 입법청원 증권거래법 개정청원, 부분 반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청원, 부분 반영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청원, 부분 반영 대통령기록보존법 제정 청원, 부분 반영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청원, 부분 반영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부분 반영 부가가치세법 개정청원, 부분 반영 임대주택관리법 제정 청원, 시정조치
1999	조세특별제한법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 부분 반영
2000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 제정 청원, 부분 반영 상임위 배정 시 이해관계 배제 위한 국회법 개정청원, 일부 반영 ↳ 2004 소위원회 회의공개 의무화, <국회법>개정안 입법청원 ↳ 2013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와 의원징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 2013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역할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청원, *2001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 ↳ 2002, 2004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 부여 등 개정 입법 청원 ↳ 200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을 개정청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청원, 2001 통과 ↳ 2003, 2010 개정안 입법 청원 집단소송법 제정청원, 부분 반영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 개정청원, 부분 반영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2003년 제정 고용보험법 개정청원, 부분 반영 ↳ 2009, 2010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공동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청원, 부분 반영

스무 살 청년의 성장스토리

참여연대 20년은 좋은 세상으로 가는
성장의 마디였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기구 변천도

동일한 성격의 활동기구는 행으로, 명칭 변경시 열로 구분했습니다.
최종 활동기구는 흰바탕으로 두었습니다.

↳: 산하기구

▲: 흡수/통합

☆: 내부독립 (활동기구로 독립)

★: 외부독립 (별도단체로 분화)

숫자로 본 참여연대 (1994~2014.5)

- 5383 성명/논평 발표
- 357 고소고발/민형사소송/행정소송/헌법소원 등 공익소송 제기
- 265 행정심판/감사청구 등 행정절차 활용
- 553 입법청원/발의/입법의견 제출
- 354 이슈리포트, 보고서 발간
- 1955 토론회/기자회견/언론기획 등 공론화 활동
- 26 인턴십/해외 펠로우십 프로그램
- 382 아카데미 교육 강좌 프로그램
- 683 단행본/ 정기간행물 발간

참여사회, 시민과 세계, 복지동향, 사법감시, 의정감시, 시민과학, ASQ, 아름다운사람들 등 포함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책위원회 ↳ 94. 사회복지위원회 ↳ 95. 경제력집중대책위원회 ↳ 95. 공공부문노사관계대책위원회 ↳ 95. 사회발전특별위원회 ↳ 96. 경제민주화위원회 ☆ ↳ 96. 국제연대위원회 ☆												정책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												
의정감시센터 ↳ 95.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지방자치센터																					
사법감시센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																					공익제보지원센터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96. 정책사업단 ↳ 96. 공익제보지원단		↳ 98.5. 정보공개사업단										행정감시센터 ↳ 07. 공익제보지원단 →13. 공익제보지원센터 ☆ ↳ 08. 정보공개사업단										
				납세자운동본부 ↳ 00. 정보공개사업단 → 03.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 00 조세개혁팀 → 03. 조세개혁센터 ☆ ↳ 02. 예산감시사업단 → 03. 해세																				
												조세개혁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경제민주화위원회(준)		경제민주화위원회						경제개혁센터						06. 8월 <경제개혁연대> ★		시민경제위원회				경제금융센터		
공익소송센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98. 아파트공동체연구소 ☆																		민생희망본부 ↳ 07. 정책사업단 ↳ 07. 토지주택공공경쟁사업단 ↳ 07. 서민경제보호사업단			
		아파트공동체연구소										▲ 03. 11월												
												노동사회위원회												
인권센터 94.12월 <인권운동사랑방> ★		해외진출기업문제특별위원회		국제인권센터		99.10월 <국제민주연대> ★				국제연대위원회									↳ 12. ODA정책위					
												평화군축센터												
		(가칭)과학기술 시민위원회		과학기술민주화모임				시민과학센터				03. 부설기구로 전환 04.11월 <시민과학센터> ★												
												공익법센터 00.11월 신설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아카데미 96. 9월 신설										03~04. 활동중단											아카데미 느티나무			
포럼 참여사회																								
참여사회 격월간				98.5월 월간으로 전환								03.11월 해소. '아름다운사람들' 과 통합									05. 월간 참여사회로 재발간			
시민위원회																					시민위원회			
												재정기획위원회												

[목록] 세상을 바꾼 성과

2001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2005 백지신탁제 도입 ↳ 2004, 2006 개정안 입법청원 ↳ 2007, 2011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청원, 부분 반영 ↳ 201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공개법(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입법 청원, 부분 반영 ↳ 20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청원, 부분 반영 주책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청원, 2001 국회 통과 ↳ 2005, 2009 개정안 입법 청원, 2011~2013 의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개정청원, 부분 반영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2001, 2003), 부분 반영 정당법 개정청원, 부분 반영
2002	고위공직자 비리조사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 (2002, 2004, 2010) ↳ 2001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제정청원 ↳ 2013 상설특검제 도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 2014 무늬뿐만 상설특검제 도입 생령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2003 국회 통과
2003	개인회생법 제정 청원, 2004 국회 통과
2004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 적용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청원, 부분 반영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부분 반영 상속재산에 대한<파산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입법조치 국민주택구모 이하 주택 분양시 원가연동제 적용 등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입법조치 ↳ 2006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공개 등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부분 반영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 200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관련 <국민연금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의견청원, 일부 반영
2005	거대금융자본을 막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입법조치
2006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입법조치 이자제한법 제정 청원 2007 제정 ↳ 2002 폭리제한법 제정청원, 2010, 2012 개정안 입법 청원 법조윤리 관련 정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부분 반영
2007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 2013, 2014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로스쿨법 제정
2008	금융기관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은행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부분 반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부분 반영 '2011 개정안 입법 청원
2009	기업형슈퍼마켓(SSM) 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동 발의, 반영 ↳ 2012 SSM허가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확대 등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입법청원, 반영 보증금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입법 청원, 전면 반영
2010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있는 시행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 부분 반영 유권자 권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청원, 부분 반영
2011	새로운 진관예우 막는 이해충돌행위 직접규제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부분 반영 수형주택 의무건설비용 축소를 막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부분반영 뉴타운, 재개발 개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부분 반영
2012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입법청원, 부분 반영 ↳ 2011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부분 반영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부분 반영 최고구간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하향, 상징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반영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부분 반영
2013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 청원 ↳ 2013 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 2013 국회 통과

발간물 리스트 정기간행물 / 단행본 2014. 9월 현재

정기간행물

- 반년간 <시민과 세계> | 참여사회연구소 | 이매진 | 25호 발행
- 월간 <복지동향>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도서출판 나눔의집 | 190호 발행
- 월간 <참여사회> | 참여사회 편집팀 | 참여연대 | 214호 발행



단행본 / 총 66권

년도	제목	부제	▶ 지은이 / ● 엮은이 / ◎ 옮긴이	출판사
2014	반성된 미래	무한 경쟁 시대 이후의 한국 사회	▶ 참여연대 기획 ● 김균	후마니타스
2014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한국시민운동 20장면	▶ 차병직	창비
2014	감시자를 감시한다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를 말하다	▶ 참여연대 기획 ● 조대엽, 박영선	이매진
2013	평화복지국가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 윤홍식	이매진
2013	스웨덴 스타일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스웨덴 모델의 미래를 보다	● 레그란드 초카구치 도시히코 ◎ 강내영, 온나자와 나오키, 홍일표	이매진
2013	2030 크로스	불임의 시대를 가로지르는 불임의 세대론	● 양정무, 윤홍식, 이상호, 이양수	이매진
2013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나눔의집
2013	대한민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나눔의집
2012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	● 윤홍식	이매진
2012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55가지 키워드	▶ 참여연대	이매진
2012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 조홍식	이매진
2011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 신광영 김연명 양재진 이정우 윤홍식	두리미디어
2011	미친 등록금의 나라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개마고원
2011	호모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 박경신, 박주민, 양홍석, 최중영, 허진민, 손익찬, 최종연	해피스토리
2010	국경을 넘어서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경희대학교 출판부
2010	허세욱 평전 : 별이 된 택시운전사		▶ 송기역	삶이보이는창
2010	2010 평화백서		● 2010 평화백서 편집위원회	검동소

2009	시티즌십 : 시민정치론 강의(참여사회연구소 연구총서)		▶ 키이스 포크 ◎ 이병천 이세형 이종두	아르케
2009	때법은 없다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 구하기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기획, 김창록 지음	해피스토리
2009	열정세대	상상력과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십대들 이야기	▶ 김진아	양철북
2008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8 촛불의 기록	▶ 글 한홍구 외, 박재동(그림), 한겨레 사진부(사진),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한겨레출판
2008	양지를 찾는 사람들	버마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	▶ 뽀뽀 곳사왕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도서출판 아시아
2008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해피스토리
2008	평화백서 2008	시민, 안보를 말하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아르케
2008	전환기의 한국복지 패러다임	새로운 방향과 대안의 모색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간과복지
2007	세계화 시대 한국자본주의	진단과 대안	● 이병천	한울
2007	한국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나눔의집
2007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역사와 좌표	● 이병천 외	한울
2006	불감사회	9인의 공익제보자가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	▶ 신광식	참여사회
2005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한국의재벌사 1	▶ 참여사회연구소·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공동기획, 송원근, 이상호	나남
2005	재벌의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한국의재벌사 2	▶ 참여사회연구소·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공동기획, 이윤호	나남
2005	재벌의 소유구조	한국의재벌사 3	▶ 참여사회연구소·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공동기획, 김진방	나남
2005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	한국의재벌사 4	▶ 참여사회연구소·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공동기획, 김덕민, 김동운, 백영현, 백운광, 유태현, 정재현	나남
2005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	한국의재벌사 5	▶ 참여사회연구소·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공동기획, 강병구, 강신준, 김상조, 김성희, 이재희, 허민영, 홍덕률	나남
2004	짜고 치나 밥시다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 10년	▶ 차병직	시금치
2004	참여연대 사회복지운동 10년의 기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나눔의집
2004	참여연대 10년의 기록(백서+CD)			
2004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실천경영론	▶ 박원순	나남
2004	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지평	참여연대 창설 10주년 기념 논문집	▶ 홍상태	아르케
2004	세계분쟁과 평화운동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아르케
2003	한국의 언론정치와 지식권력	시민과세계 총서 002	▶ 김만홍 외	당대
2003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 경향신문, 참여연대	한울
2002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 7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사계절출판사
2002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 6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사계절출판사
2002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시민과세계 총서 001	▶ 박원순	당대
2002	과학기술·환경·시민참여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울
2001	가치를 꿈꾸는 과학	교실에서 함께하는 과학윤리수업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STS 교육위원회	당대

2001	20세기 한국의 야만 1		▶ 참여사회연구소	일빛
2001	20세기 한국의 야만 2	평화와 인권의 21세기를 위하여, 1960년대~현재	▶ 참여사회연구소	일빛
2001	삭스핀스프와 뽕뽕국물	참여연대 안내데스크 24시	▶ 이해숙	아르케
2001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		▶ 이병천·조원희	당대
2001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 기행		▶ 박원순	아르케
2001	세계사적 나침반은 어디에	참여연대시민강좌 1	▶ 참여연대·참여사회아카데미	한울
2001	20세기 한국을 돌아보며	참여연대시민강좌 2	▶ 참여연대 참여사회아카데미	한울
2000	유리지갑 흥대리의 세금이야기		▶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한겨레신문사
2000	참여연대와 여성시대의 숨은 권리찾기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5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사계절출판사
2000	참여연대 개혁통신		▶ 참여연대	문예당
1999	진보의 패러독스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하여	▶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당대
1999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박원순 변호사의 미국 시민운동 기행	▶ 박원순	예담
1999	한국 5대 재벌백서 1995-1997		▶ 참여사회연구소	나남
1999	한국재벌개혁론		▶ 김대환	나남
1998	공익재단법인백서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지정
1997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		▶ 참여사회연구소	푸른숲
1997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 참여사회연구소	창작과비평사
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이은영외)	나남
1996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박영률출판사

더 자세한 참여연대 간행물 ▶ bit.ly/1lEKzeE

활동보고

2013~2014

참여연대는 매년 연례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3~2014년 활동보고를 20주년 보고서와
통합하여 발간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활동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 이후 드러난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불법행위자 형사고발, 특별검사 임명 청원, 국정원 개혁법안 청원

시민 111명을 모집해 원세훈 전 원장 등 9명을 고발하였고, 국정원 사건 수사를 방해한 서울경찰청 간부 15명을 고발하여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도 고발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검찰수사를 뛰어넘는 특별검사 임명 청원운동을 제안했고,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3년 연말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운영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를 밀착모니터하며 의견서 전달, 방문면담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개혁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회원, 상근자, 임원,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행동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를 결성해, 10개월 간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촛불집회 외에도 다양한 시민참여행동을 제안하고 진행했습니다. 전국 순회 설명회와 4개 대학 캠퍼스 강연회, 회원과 임원 500여명이 참여한 ‘민주주의 되찾기 참여연대 거리행진’,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한 ‘18대 대선 1년 민주회복 시민행진’, ‘국정원이 빼앗아간 헌법 제1조를 찾습니다-제한절 전국동시 1인시위와 인증샷 시민행동’,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는 ‘참여연대 출근길 1개월 행진’과 ‘참여연대 임원 1개월 릴레이 1인 시위’, 국정원 사건 설명 만화제작 시민모금 등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국정원, 이번 지방선거에서 꼼짝도 하지마라”는 시민경고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13. 11. 9. 참여연대 임원, 회원, 활동가들 500여명이 거리행진에 함께했다. 사진제공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을 슬픔과 절망에 빠트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슬픔과 부끄러움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애꿎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면서, 참사를 막지 못한 부끄러움과 잊지 않고 참사 규명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곧 바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5월 1일부터 한 달간 서울광장에 ‘애도와 성찰의 벽’ 30여개를 만들어 시민들의 추모와 성찰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정책 대응과 공론화 활동

지난 5월 9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참여연대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참담함을 나누었습니다. 감사원에 참사에 책임이 있는 부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유가족과 시민을 가로막은 경찰을 고발했습니다. 세월호 관련법안들의 발의 실태를 알려내고, 참사 원인에 대한 진단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토론회도 수차례 개최했습니다. 6월에는 경향신문과 함께 ‘세월호 참사 두 달, 이것만은 바꾸자’ 공동기획을 진행하며 법,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과거 여러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결성한 재난안전가족협의회 구성(8월)을 지원했습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결성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운동

전국 800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했습니다. 5월부터 주말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촛불행동을, 매주 금요일에는 팽목항으로 가는 ‘기다림의 버스’도 운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세월호특별법’ 청원 천만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유가족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416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행진’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자 국민대책회의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농성에 동참했습니다. 아직 국회는 독립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은 한국 사회가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일 뿐입니다. 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국회를 시민 품으로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행

박근혜정부 1년 이번에도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1년 검찰의 실태를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채동욱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나름 의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채 검찰총장을 축출한 뒤, 청와대는 검찰을 급속히 장악했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의중에 따라 움직여 이명박정부 때 못지않은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박근혜정부 1년 검찰의 모습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작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 보고서 발행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부의 주요 직책은 오래 전부터 검찰출신 간부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찰출신 간부들을 통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법무부의 정책이 검찰의 입장이나 시각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간부들의 부패행위가 있어도,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제식구 감싸기’식 태도를 보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오랫동안 검찰개혁 과제로 제시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법무부 검사 파견 제한’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달라지고 있을까요?

퇴행할 때로 퇴행해버린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은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의 권력비판 기능을 위촉시키는 부당한 방송통신심의에 맞서는 공익소송을 진행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시민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국회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2014년 6월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가 법무부 검사 파견 제한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검사가 차지하고 있는 법무부 직책의 수가 해가 바뀌어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핵심 국장과 실장은 오직 검사만이 맡을 수 있다는 법무부 직제규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국회는 여전히 시민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경찰이 막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방청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안이나 예산안을 ‘짜고 치거나’ ‘맞겨래하는’ 경우가 빈번한 소위원회 방청은 시민들에게 안감생심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그룹을 구성하고 국회를 바꾸자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국회의원들과 토론하는 ‘국회에서 놀자, 국회를 말하자’ 이벤트, 국회의장에게 국회출입 통제 개선을 촉구하는 질의서 보내기, 국회 앞 100미터 집회 절대금지구역 해제 헌법소원 제기, 국회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발표하고 공론화했습니다. 서울광장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를 시민 품으로’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권력비판 방송프로그램 징계에 맞서는 공익소송

시민들의 정부 비판을 정부기관이나 공직자들이 고소하고 소송하는 ‘국민 입막음 소송’이 이명박정부 이후 부쩍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방송통신심의권을 이용해서 권력비판 방송프로그램에 징계를 내려 언론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방송프로그램에 내려진 정치적 징계처분에 맞서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것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해 3월 시민방송 RTV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것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았습니다. 국가정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인터뷰한 것에 대해 JTBC의 <뉴스큐브6>를 중징계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을 알리는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국민안전전을 지키는 활동

"모든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의료, 철도,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나서는 정부를 상대로 참여연대는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필수적인 규제를 강조하며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시민 안전에 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혁과 경제민주화 초석 마련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전국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슈퍼갑' 대기업의 횡포에 짓밟힌 가맹점주,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당사자 지원은 물론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언론기획 등의 공론화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쳤습니다. 20여건에 달하는 공정위 신고와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남양유업 같이 피해점주와 본사 간의 상생교섭이 이뤄져 일부 점주들의 문제가 해결됐으며,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운동도 진행하며 지역경제와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 실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찾기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한편, 통신공공성에 기반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또 토익 시험과 영어학원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이 불합리하다고 공감하는 생활 속의 각종 민생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해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작지만 소중한 권리 '소소권'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 사학비리 감시 활동

마사회가 학교에서 230m 떨어진 곳에 25층 규모의 용산 화상경마장을 기습 개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주거권·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즉각 감사원 감사청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했고,

학교보건법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각종 사학비리로 얼룩진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를 비호한 의혹이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도 고발하였습니다.

‘갑’ 편향적인 공정거래사건의 집행체계 개혁운동

우리나라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는 경제적 강자인 '갑'에게 유리하고 약자인 '을'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갑' 편향적인 감독행정을 감시, 비판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분쟁조정절차 개혁, 사건처리기간 단축, 공정위 권한의 위탁과 분산 등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해왔습니다.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사례 발표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전속고발권 분산, 사건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공정위 내부절차 개혁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을'의 항변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활동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모피아' 대응 활동

KIKO 사태, 저축은행 부실 사태, 동양사태, 카드 3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 등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금융의 비중은 커지는 데 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행정과 제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융감독원 신고, 동양사태 감사원 감사청구, 특정금전신탁상품 규제 강화 필요성 보고서 발행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사자 운동과 제도개혁 활동을 벌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학교 옆 도박장, 안돼요" 2014. 7. 14.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철회를 호소했다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입법청원하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 정부예산안 공동 감시활동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커녕 제도적으로 변변한 감시 장치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예산의 삭감·증액 안을 함께 분석·토론하고, 국회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활동을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정부예산안을 검토, 분석하여, 2014년 정부예산안 중 6개 분야(환경, 산업, 문화, SOC, 일반공공행정, 국방외교) 총액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54개의 문제 사업들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12개 사업 193.7억 원이 삭감·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활동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대통령 공약과는 다르게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깎아서 지급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서울에서 울산까지 전국 순회설명회, 대학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했고, 거리캠페인, 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기초연금법이 가진 문제점을 알려나가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법 개정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의료영리화, 민영화 저지 활동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 영리사회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영리병원 설립조건을 완화하는 등 본격적인 의료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의료법 시행규칙 의견서 제출 운동, 의료민영화 반대 인증샷 캠페인, 의료민영화 문제점 기자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생활임금 도입 확대와 정착을 위한 활동

공공계약이나 조달과 같은 공공행정과 지방자치를 통해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생활임금. 참여연대는 생활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을 이끌어내고, 각급 자치단체 등과의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생활임금제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하여 많은 기초단체들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노동조합 등과 함께 생활임금 도입을 확대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북아시아 군비 감시 운동

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칩니다. 군사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대와 교육현장에서는 폭력적 군사주의 병폐가 터져 나옵니다. 안보 영역이야말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향한 참여연대의 국내외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북아 군비축소를 위한 시민행동

2013년 10월 국방부가 후원하는 무기전시회(ADEX)를 겨냥했습니다. 매년 개최해왔던 평화군축박람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를 열어 무기의 비윤리성과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알리는 연속 칼럼, 거리 전시, 직접행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네 번째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으로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와 온라인에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져올 동북아 군비경쟁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 민주화 운동 탄압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최루탄 수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

강정은 여전히 아픔입니다. 기지건설에 저항했던 이들에게 수많은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십시일반 나누기 위해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지난 해 10월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다뤄지게 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과 안보상의



"이 무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나요?" 2013. 11. 1. 일산 킨텍스 무기전시회(ADEX) 살상무기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평화 활동가들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반인권적 안보교육 감시와 군 인권 개선 촉구 활동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학생 대상 안보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 적개심을 주입시키고, 무기를 다루는 교육을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전국 교육감과 국방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현행 안보교육 실태를 알리고,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과 평화교육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을 모아냈습니다.

군대 내 극심한 폭력 문제에 대해 군 인권법 제정을 통한 외부감시제도 도입을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 복무기간 단축, 군 사법개혁 등을 포함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

유엔에 한국 인권 실태 보고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직접 참가해 한국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인권옹호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밀양, 강정에서의 인권침해,

철도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노동 탄압 문제를 알리고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각 현안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지 성명을 이끌어내는 것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시민사회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국제 행동 주간(8.8~14) International Solidarity Week to Remember the Sewol Ferry Tragedy을 기획,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진상규명 촉구와 응원 메시지를 받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조사위원회 등 해외 사례의 재난조사 활동을 평가하여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2014. 3. 28. 회원간 소통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회원월례모임' 첫번째 만남

참여연대를 시민의 놀이터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회원과 편안하고 즐겁게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참여연대가 문을 닫는 날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고민거리겠지요. 청년부터 노인까지, 직장인부터 주부들까지 모여 공부하고 실천하는 장이 되길 꿈꿉니다. 특히 20주년을 맞아 청소년, 청년층의 참여를 높이는 프로그램과 공간개선 프로젝트 '시민의 놀이터'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들과 만나는 참여연대

2006년부터 시작된 청년연수프로그램을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했습니다. 미래 시민사회의 주역인 청년,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참여연대 청년모임을 준비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원월례모임' 신설

2014년부터 회원들의 소통과 멤버십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월례모임'을 신설해 새로운 형태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자들이 정성껏 준비하는 '통인밥상'과 함께 매달 선정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3월은 '들꽃' 4월은 '노동', 5월은 '세월호 참사'와 고장난 나라, 6월은 'KBS보도개입사태'로 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공간이 운동한다'

'시민의 놀이터, 공간이 운동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참여연대 사옥의 공간개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아카데미 강당으로 활용하던 지하를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1층은 회원과 시민들이 부담 없이 교류할 수 있는 카페로 확장, 개선됩니다. 또한 기존에 업무공간이었던 2층은 대규모 행사 및 시민모임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공간개선 사업은 단순히 공간의 디자인을 바꾸고 확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간도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참여연대의 건물이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진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배움의 공간, 힐링의 공간, 참여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참여사회연구소

수강생의, 수강생에 의한, 수강생을 위한 느티나무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를 모토로 2009년 새롭게 문을 연 느티나무 아카데미가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연간 진행되는 50여개의 강좌들은 다양한 색깔과 모습으로 회원들과 시민들을 반겨왔습니다. 특히 '노명우의 세상물정 독서워크숍'과 '윤홍식의 복지국가 독서클럽'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히자는 목표로 2014년 새롭게 시도된 강좌입니다. 전달형 강의 방식을 탈피하고 참여형 세미나방식으로 진행된 독서클럽은 신청이 조기 마감 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매 학기의 끝자락에 진행되는 종강행사는 지난 봄 학기로 일곱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참여하는 종강행사는 느티나무 아카데미의 대표 행사입니다. 단순한 수강생이 아닌 주인으로 참여하는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언제나 새로운 시민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복지국가 향한 진보담론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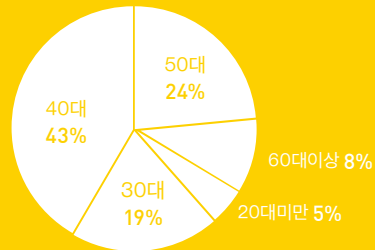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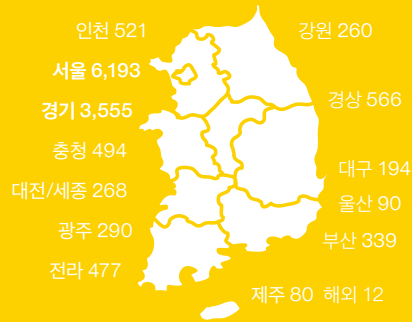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을 모토로 시민운동을 연구하고 대안정책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포지엄 <평화복지국가의 조건 : 정치적 조건과 주체역량>을 개최하고 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사회포럼'을 열었습니다. 매주 2회씩 정기적으로 프레스미팅에 연재되는 '시민정치시평'은 270호(2014. 8월 현재)를 발행했습니다. 반년간 학술잡지 『시민과 세계』 25호(2014. 8월 현재)를 발간했습니다.



2014. 6. 24. 참여연대 강릉옥상에서 열린 아카데미 느티나무 불학기 종강파티

총회/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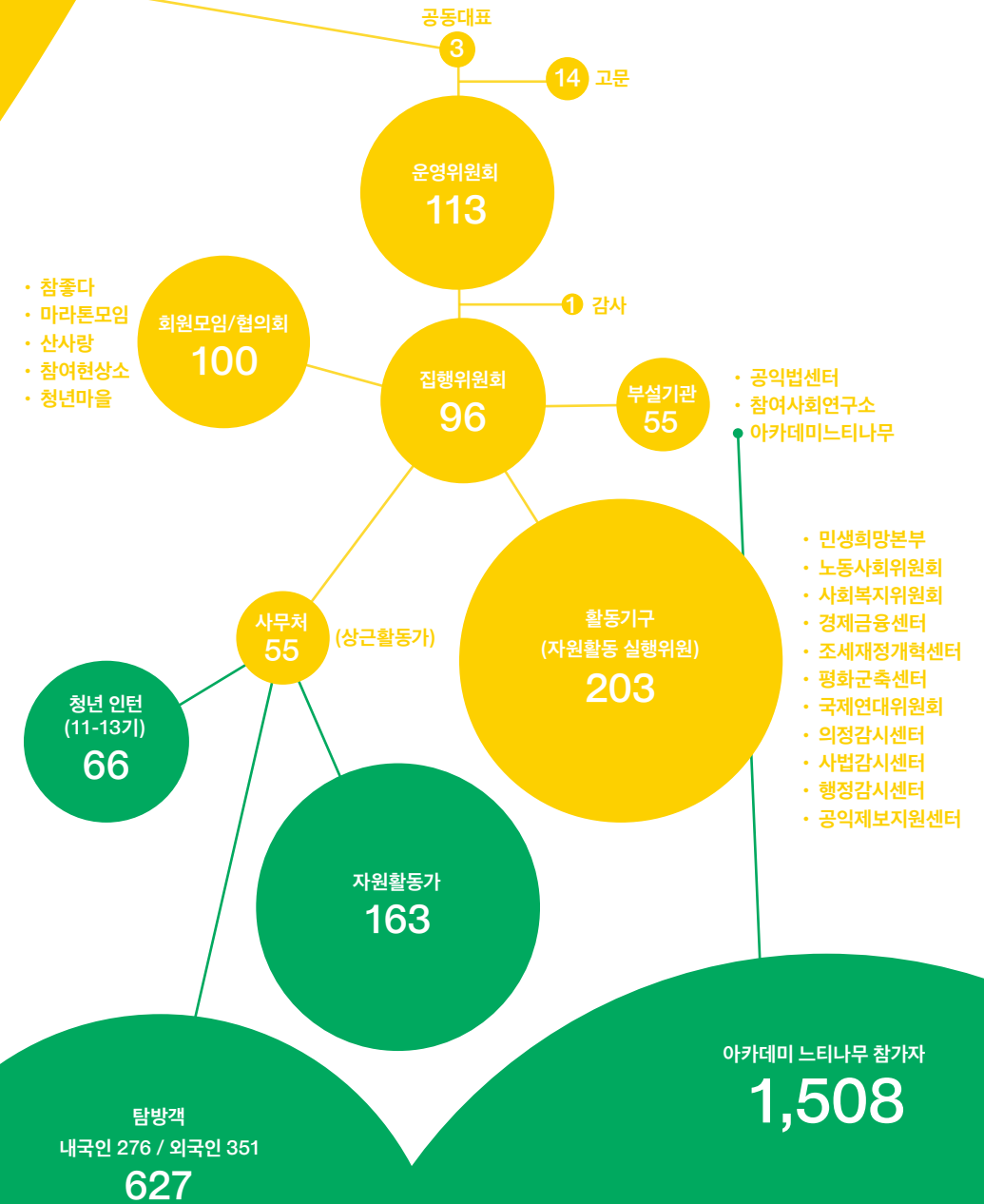
14,505



공식 SNS (트위터, 페이스북) 팔로워

41,578

■ 기구표 상 조직도
■ 오프라인
■ 온라인





연도	날짜	주제	활동
2013	0627	국정원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결성
2014	0628	국정원	'국민설명회·표창원/진선미/박주미이 말한다' 개최
2014	0717	국정원	제헌절 전국동시 1인 시위 '국정원이 빼앗아간 헌법1조를 찾습니다' 진행
2014	0810	국정원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전국동시다발 범국민 10만 촛불집회
2014	1109	국정원	'민주주의 되찾기 참여연대 거리행진-해도해도 너무한다' 개최
2014	1203-1228	국정원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촉구 참여연대 임원 릴레이1인 시위
2014	1223	국정원	국가정보원 개혁 의견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제출
2014	4월	국정원	국가기관 개입 없는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제안 및 결성
2014	4월~5월	국정원	'국정원, 이번 지방선거에서 꼼짝도 하지마라-시민경고엽서 쓰기' 캠페인
2014	8월-11월	국정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감사 청원 캠페인 및 청원서 국회 제출
2014	0501-0724	세월호	서울시장청장 '애도와 상찰의 벽' 운영
2014	0514	세월호	청와대와 해경과 해수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14	0515	세월호	가족 상경 막은 경찰의 직권남용 고발
2014	0519	세월호	토론회 '고장난 나라와 세월호, 다시 국가를 묻는다' 개최
2014	0522	세월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발족
2014	0531	세월호	세월호 특별법 천만서명운동 시작
2014	0616-27	세월호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 '세월호 참사 두달, 이것만은 바꾸자' 7회 연재
2014	0715	세월호	350만 국민의 416특별법 제정촉구 청원행진
2014	0723-24	세월호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중행동(동조단식 등)
2014	0724	세월호	참사 100일, 서울광장 집회 및 청와대로의 행진
2014	0815	세월호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촉구 위한 416 국민농성
2014	0408	공익법	선전물 'JTBC 중징계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작
2014	0704	공익법	방송통신심의위의 박창신 신부 인터뷰 CBS 제재처분취소 소송 제기
2013	1127	공익법	방송통신심의위의 <백년전쟁> 방영 RTV 제재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3	0612	사법감시	상설특별감사 임명 법률안 국회 청원
2013	0616	사법감시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2013	1016	사법감시	'나는 이런 검찰총장을 원합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시민의견 보내기
2014	0401	사법감시	2014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2013	0925	의정감시	국회 앞 100미터 집회절대금지 집시법 헌법소원 제기
2013	1001	의정감시	국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2014	0116	의정감시	6.4 지방선거 전에 해결해야 하는 정치개혁과제 발표
2014	0217	의정감시	투표참여 권유행동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2014	1월~4월	경제금융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촉구 활동
2013	0710	민생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차단 문건과 검찰 대학생 탄압을 통해 본 한국사회 대학생 인권진단 발표회 개최
2013	0719	민생	사립대학의 종합편성채널 투자에 대한 교육부 조사 촉구 활동
2013	0805	민생	롯데그룹의 일차상인 관련 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2013	0806	민생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입점,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 발표회 개최
2013	0926	민생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장학금 예산삭감 규탄 및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활동
2013	1001	민생	국순당의 불법행위 및 횡포 관련 공정위 신고
2013	1010	민생	이동통신사의 자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를 mVolP 서비스 차단 관련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3	1120	민생	롯데 계열 편의점의 롯데 계열사 '롯데기공'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신고
2013	1128	민생	토익 응시료 부담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2013	1231	민생	전국 최초 재벌슈퍼마켓(SSM/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원점) 전격 폐점
2014	0205	민생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공동발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2014	0212	민생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항소심도 승소
2014	0227	민생	카드사 개인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 제기
2014	0320	민생	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대한 금융위 조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감사청구
2014	0409	민생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발간
2014	0527	민생	SKT, KT 알뜰폰 등록허가조건 위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2014	0528	민생	이슈리포트 '갑을개혁 운동 1년을 평가한다' 발간
2014	0602	민생	6.4좋은정책연대 10대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 입장 발표
2014	0624	민생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15회 연재
2014	0324	민생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비공개저해 관련 공익소송 제기
2014	0625	민생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수련대 교수임용 특혜 의혹 관련 고발
2014	0812	민생	과거와 최근 참사 유가족모임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출범
2014	0819	민생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건립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개정안-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
2014	0825	민생	SKT 불통사태에 대한 통신소비자 집단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0702	복지노동	토론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진단과 대안' 개최
2013	1009	복지노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 2 - 기초자치단체 사례 발표
2013	1113	복지노동	토론회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전략' 개최
2013	1114	복지노동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2013	11월	복지노동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 관련 긴급 좌담회 개최 및 1인 시위 진행
2013	1222	복지노동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2013	8월~11월	복지노동	전국 시민사회 순회 연금설명회 개최

2013	9월	복지노동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화 서명운동
2013	9월~10월	복지노동	강좌 '복지국가와 나: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삶을 위하여' 개최
2013	9월~12월	복지노동	기자설명회 등 기초연금 도입 행동의 날 진행 (3회)
2014	0227	복지노동	토론회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개최
2014	0303	복지노동	긴급좌담회 '무엇이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개최
2014	0418	복지노동	소책자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대한민국 빈곤의 정석' 발간
2014	0616	복지노동	의료법을 위반한 보건복지부를 고발한다! 의료민영화 반대 활동 기자설명회 개최
2014	0731	복지노동	설명회 '사회복지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이해와 대안 모색' 개최
2014	1월~	복지노동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및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2014	2월~	복지노동	기초법 개악저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활동
2014	3월	복지노동	대학순회 청년연금간담회 '당신도 노인이 된다 - 영맨, 연금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진행 (2회)
2014	4월~5월	복지노동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를 위한 촛불 문화제 '연금을 위한 촛불, 다함께 촛불라!' 개최
2014	5월	복지노동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 진행
2014	6월	복지노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및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2014	7월	복지노동	찾아가는 거리빈곤상담 3회 실시
2013	3월~10월	시민경제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 활동
2013	9월~12월	시민경제	우리는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동양사태 등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2013	8월~12월	조세재정	작지만 큰 성과,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감시활동
2013	1007	평화국제	영문자료 <제주 해군기지, 강정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발간
2013	1013	평화국제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 입장 발표
2013	1017-19	평화국제	강정책마를 10만대권 프로젝트'와 '2013 강정생명평화 한마당' 진행
2013	1028-1103	평화국제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 <우리가 평화를 살 수 있습니다> 개최
2013	1028-1106	평화국제	연속칼럼 <죽음의 거리를 멈춰라> 6회 게재
2013	1028-1108	평화국제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아태지역 해양 군사화에 맞서 평화성명서 채택 요청 공개서한 발송
2013	1031	평화국제	바레인으로의 한국산 최루탄 수출금지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2013	1106	평화국제	59개 국제 시민단체, 밀양 주민 송전탑 반대 투쟁지지 성명 발표
2013	1218	평화국제	국제 선거감시 단체와 인권단체, 한국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심각한 우려 표명
2013	1222	평화국제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2014	0114	평화국제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대한 시민사회 재언 보고서발간
2014	0310	평화국제	유엔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에서 참여연대 구두의견서 발표
2014	0312	평화국제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Protecting Human Rights Defenders in Asia: Trends, Challenges, and Ways Ahead' 개최
2014	0319-0320	평화국제	한국 최루탄 수출통제 필요성과 관련법 개정 촉구 토론회 및 공개간담회
2014	0326-0329	평화국제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발족, 강정법률지원기금아련 후원주점 개최
2014	0414	평화국제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날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공동캠페인 진행
2014	0422	평화국제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북아 평화 국회토론회 개최
2014	0520	평화국제	강정마을 벌금폭탄 규탄, 자진노역 결의 기자회견 개최
2014	0527	평화국제	국내 7개 평화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평화권 선언 초안에 대한 서면의견서 전달
2014	0610	평화국제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4	0616	평화국제	GPPAC 국제워크숍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개최
2014	0622	평화국제	이슈리포트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발간
2014	0623	평화국제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2014	0701-0710	평화국제	일본정부의 헌법해석변경 위한 각의결정 규탄 공동행동 및 각계 시국회의 개최
2014	0713	평화국제	제주해군기지 입지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성명 발표
2014	0717-29	평화국제	2014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즈음한 칼럼 연속기고 (6회)
2014	0728	평화국제	학생 안보교육 실태공개 촉구 기자회견 및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안보교육 관련 공개질의
2014	0819	평화국제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2013	연중	시민참여	역사탐방 총 4회 (4/13, 5/11, 10/12, 11/16) 개최
2013	0427	시민참여	회원 불나들이 - 안동
2013	1101-11/22	시민참여	시민행동기획단 워크숍 총 4회
2013	연중	시민참여	2013 신입회원한마당 총 6회(1/30, 3/27, 5/29, 7/23, 9/25, 11/27)
2013	연중	시민참여	카페통인 영화상영 7회
2014	0106-0220	시민참여	13기 청년인턴프로그램
2014	0322, 0329	시민참여	지역회원한마당 - 광주, 대구, 대전, 부산
2014	0719-0720	시민참여	창립20주년 기념 회원캠프 (문경새재) 진행
2014	0902-1128	시민참여	12기 청년인턴프로그램
2014	연중	시민참여	회원월례모임 4회
2013	연중	아카데미	2013 시즌별 학기 진행 (겨울, 봄, 여름, 가을) 총 51개 강좌(322번 강의) 진행
2013	연중	아카데미	아카데미네트나우 5주년기념사업 (페다가지개발워크숍, 자아탐색프로그램집담회 외)
2014	연중	아카데미	2014 시즌별 학기 진행 (겨울, 봄, 여름) 총 27개 강좌(170번 강의) 진행
2013	0305	참여사회연구소	다행본 '2030 크로스 : 불임의 시대를 가로지르는 불임의 세대론' 발간
2013	0404	참여사회연구소	다행본 '스웨덴 스타일 :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스웨덴 모델의 미래를 보다' 발간
2013	1011	참여사회연구소	심포지엄 '평화복지국가의 조건 : 정치적 조건과 주체역량, 유럽 시민주의의 이노베이션' 개최
2013	1219	참여사회연구소	다행본'평화복지국가 :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발간
2014	0519	참여사회연구소	토론회 '고장난 나라와 세월호, 다시 국가를 묻는다' 개최
2014	0610	참여사회연구소	토론회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 개최
2014	0707	참여사회연구소	다행본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 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체를 찾아' 발간
2014	연중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매주 발행(총 266호)
2014	0815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 학술지 『시민과 세계』발간(총 25호 발간)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갑시다

1994년 9월 10일, 참여연대는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권력의 남용과 집중, 기회의 독점을 감시하고 고발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이 권리로써 보장되도록 수많은 정책과 대안을 제안하고 제도화하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모든 시민들과 가까이 연대하고 국경을 넘어 동료애를 발휘해왔습니다. 회원과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에 기초한 자립재정은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힘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념비적인 시민행동이 일어나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참여연대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 쟁취한 제도와 권리조차도 시민이 부단히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켜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쉽사리 후퇴한다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부패와 특권의 사슬, 냉전의 유산과 분단의 장벽,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가로막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습니다. 대결의 평행선을 만들어내는 이념적 정치적 편가르기, 공존을 거부하는 적대와 혐오, 공론의 형성을 방해하는 정보 불균형과 언론매체의 독점도 큰 장애물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더디게, 시장의 권력은 빠르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경쟁사회, 소수에게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양극화 사회, 나날의 안전이 위협받고 생태가 파괴되는 위험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관계가

상호 불신과 군사대결의 덫에 갇히면서 한반도 정전체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거세지고 있는 군사주의와 새로운 패권경쟁은 이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4년 오늘 우리 사회와 지구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오랜 노력은 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영리추구를 다른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체제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공공기능을 약화시키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장난 체제가 강요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시민들의 다짐과 행동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탐욕과 특권을 정당화하고 대다수 시민을 불행으로 내모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사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와 시련, 그리고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온 역사를 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시민의 파수꾼이자 대변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주권을 옹호하는 것은 참여연대의 한결같은 사명이며 지난 20년의 활동과정에서 확인된 존립근거입니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참여연대의 고유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외교안보영역까지 시민의 감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의 정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필수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확립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참정권과 자치권의 실현을 제약하는 낡은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의사표현과 행동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온전한 참여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편가르기를 경계하고 편견과 차별에 맞서겠습니다. 사회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겠습니다. 이기심과 경쟁 대신 시민의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와 화해가 정착되도록 시민의 교류와 협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시민의 동반자,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더욱 혁신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사회변화의 수단이자 새로운 공동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혼자 앞장서기보다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성숙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신실한 동반자,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각계각층 시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데 참여연대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의 길을 찾겠습니다. 시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젊고 활기찬 참여연대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운동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턱 없는 놀이터,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한 학습과 치유와 훈련의 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원들이 보다 주도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를 개방하고 개혁하겠습니다.

자립재정을 바탕으로 나눔과 협력의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행동하는 시민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활동가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시민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하겠습니다.

참여연대가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변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참여와 연대 20년, 청년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가꾸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찰과 쇄신의 신발 끈을 고쳐 맵니다. 더 새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더 따뜻하고 군세계, 참여연대가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2014. 9. 10.
참여연대 회원 일동

팔팔한 스무살 참여연대의
8가지 혁신 키워드, 8가지 중장기 의제

참여연대 20주년 성찰과비전보고서 발제

8가지 혁신 키워드

소통 능력 :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정책입안자를 상대로 작성하던 딱딱하고 복잡한 콘텐츠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SNS와 모바일 환경에 따른 온라인 소통능력을 강화하고 참여연대 대안미디어를 개발해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겠습니다.

현장성 : 현장과 유리된 시민운동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현장과 당사자에 기반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성 : 날이 갈수록 지식사회가 자본과 권력에 촘촘히 포획되고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전문가층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식사회의 독립적인 비판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사회운동에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시민 리더십 : 지역과 부문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활동가 교육(Training of Trainers)을 개발하고 정례화하겠습니다. 시민참여기구를 단계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청년 참여연대를 우선 발족하겠습니다.

변화의 공간 : 참여연대 건물을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참여연대 사옥을 주민과 시민에게 열린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글로벌 참여연대 : 민주주의/평화/개발협력을 위한 지구범위의 시민연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활동가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시민협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나눔과 협력의 재정 : 자립재정을 넘어 나눔과 협력의 재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림은 알뜰하게, 연대와 협력의 비용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출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공동체 : 참여연대를 지난 20년간 지탱해온 회원과 임원, 활동가들의 세대교체를 앞두고 세대를 잇는 참여연대 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상근활동가 역량 강화와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활동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19차 정기 총회에서 성찰과비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균, 임종대, 정현백, 이석태 공동대표) 구성하여 지난 1년 6개월간 운영해왔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는 참여연대의 20년 활동을 평가하고 비전의 재정립을 돕기 위해 산하에 평가비전위원회(위원장: 이석태 공동대표)를 별도로 운영해왔습니다. 평가비전위원회는 지금까지 11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비전워크숍, 회원과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회원공청회를 주관하여 참여연대 20주년 성찰과비전보고서의 골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지난 8월 23일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성찰과비전보고서를 간추린 것입니다.

8대 중장기 의제

권력유착과 부정부패 척결 : 부정부패와 권력유착을 감시하고 국가권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권력감시의 기본입니다.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 지난 20년간 권력의 특성이 변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가기관의 공적 기능이 위축되는 환경 속에서 권력감시운동은 공공정책과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지켜내는 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사회권 보장 :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대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활동은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 인간성과 생태를 파괴하고 특권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참여민주주의 행동수단의 확대 :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으로서 소비자로서 납세자로서 시민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참여수단과 권리구제 수단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외교안보권력, 정보권력의 민주화 : 성역처럼 여겨졌던 외교안보통상 권력, 첨단 정보화 시대의 정보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동아시아 공동체 :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주의와 패권적 적대정책으로는 평화의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영의 극복과 사회적 연대 : 시민사회 단체 스스로 성찰하고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높이는 한편, 대립의 평행선이 지속되는 사회적 난제에 대해 이견그룹과의 진정성 있는 토론과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1, 정치적 독립 원칙

어떤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 시민들, 그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감시받지 않는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일상적인 감시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권력을 감시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참여연대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몇몇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감시 단체인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시민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눈으로 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2, 재정 자립 원칙

참여연대의 자량 가운데 하나이며, 지칠줄 모르는 활동의 원천입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1998년 이후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위해 '회비 100% 재정'을 목표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회원과 시민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제껏 고집스레 지켜온 재정 원칙을 앞으로도 고수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임원 및 상근자의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중

- 주요 임원 및 상근자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할 수 없다
- 주요 임원 및 상근자는 정당 및 후보자의 캠프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연대 정관 41조, 내규2-3-1 제5조

- 정관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 임원에 관한 내규 제3조 정관 제41조상의 주요 임원은 집행위원을 말한다. 단, 집행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에도 주요 당직 및 공직에 취임하거나 입후보 할 경우 사전에 사임해야 한다.

참여연대 재정에 관한 내규 제3조 (재정원칙)

- [회비우선의 원칙] 참여연대 운영 재원의 근간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이다.
- [정부지원금 거부의 원칙] 정부로부터 지원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연대가 참여하는 연대사업 등의 경우 사업의 공익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비의존 원칙] 참여연대의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개인과 단체의 후원금은 받지 않는다.

2013년 참여연대 살림은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회비에 의한 재정총당율 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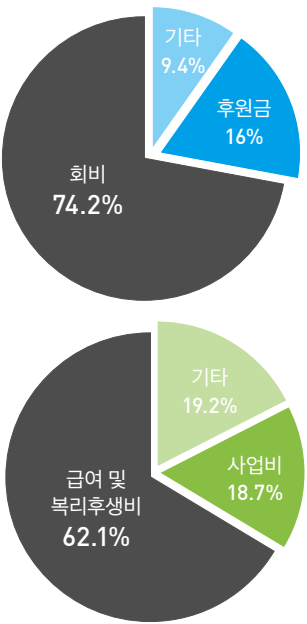
참여연대 재정은 회비, 후원금,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마련됩니다. 2013년 총수입은 2012년에 비해 0.96% 증가했습니다. 회비 수입은 14억 7천만여 원으로 전년대비 3.46% 증가했고, 후원금과 사업수입은 각각 4.73%, 1.75%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 총지출은 2012년과 비교하여 약 4천 8백만원 감소했습니다. 전체 지출의 62%를 차지하는 상근자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6% 증가했으나, 사업비 지출이 전년대비 11% 감소하였고, 그 외 사무처를 비롯 각 활동기구의 운영비 절감으로 전체 지출이 전년대비 2.36% 감소했습니다.

회비수입 증가와 비용 절감으로 2013년 약 1천 6백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회비에 의한 재정총당율(총지출에서 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4.8%로 2012년 70.6%보다 높아졌습니다.

2013년 수입 지출 (단위 : 원)

수입	1,989,386,670
회비	1,476,362,780
후원금	318,213,846
사업수입	186,109,126
이자수익+잡이익	8,700,918
지출	1,973,246,085
급여+복리후생비	1,225,772,595
퇴직급여	37,206,285
사업비	369,474,416
운영비	93,310,891
지급수수료	76,697,939
건물관리+사무용품	44,117,870
부설기관 회비 등	37,972,200
감가상각비	46,038,869
이자비용+잡손실	30,131,360
기부금지출	10,708,800
법인세	1,814,860
당기순이익	16,140,585



권력감시분야

- 사법감시센터 723-0666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한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 의정감시센터 725-7104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행정감시센터 723-5302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익제보지원센터 723-5302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사회경제분야

- 노동사회위원회 723-5036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민생희망본부 723-5303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사회복지위원회 723-5056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경제금융센터 723-5052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재정개혁센터 723-5052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평화국제분야

- 국제연대위원회 723-5051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평화군축센터 723-4250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조직운영분야

- 시민참여팀 723-4251 회원행사 자원활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을 담당합니다
- 운영기획팀 723-5304 사무처 재정과 후원·운영을 담당합니다
- 정책기획팀 725-7105 참여연대 정책을 기획·조율·관리합니다
- 미디어홍보팀 725-7105 참여연대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알리고 시민과 소통합니다

부설기관

- 공익법센터 723-0666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아카데미나눔 723-0580 시민과 함께 진보·인문·행복을 공부합니다
- 참여사회연구소 764-9581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상근활동가 2014년 8월 현재

- **사무처장** 이태호
-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박정은 안진걸 이승희
- **시민감시1팀** 이지현 김은영 박성은 이선미
- **시민감시2팀** 장정욱 유동림 이은미 이지은 정민영
- **평화국제팀** 김희순 김승환 백가운 이미현 황수영
- **경제조세팀** 장흥배 신원기 이상우
- **민생팀** 최인숙 심현덕 장동엽
- **복지노동팀** 김남희 김은정 김잔디 이경민 최재혁
- **시민참여팀** 이진선 김주호 이영아 이정민 이조은 전보임 천웅소
- **운영기획팀** 김현정 박효주 신기대 오유진 이지은 차은하
- **정책기획팀** 이재근 이승희 강진영 김태일
- **미디어홍보팀** 이계정 김다혜 이셋별 신미지 이선희 이영미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홍석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대표전화 02-723-5300
팩스 02-6919-2004
ARS 060-7001-060 한통화 5천원
회원가입 02-723-4251 we@pspd.org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참여연대 20주년 활동보고서 1994-2014

발행일 2014. 9. 15.
발행처 참여연대
발행인 김균 이석태 정현백

컨텐츠 활용과 인용은 참여연대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1998년 이후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